



#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19('22-9) | 2022. 09. 01.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능가하면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하나  
권영태

합리·체계적인 사고, 기본과 원칙에 고지식한 軍의 필요성  
김성진

비전통적 위협 대비와 보훈활동 강화의 필요성  
나태종

##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능가하면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하나

권 영 태

(좌표 22 대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미중 대결의 본질은 가치 대결이라고 언급했다. 가치 대결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옳고 그름의 대결이라는 뜻이다. 영화 ‘한산’의 표현을 빌려 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 기준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이나 그렇지 않느냐이다. 만약 앞으로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명실상부하게 능가하게 된다면 세계사의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치 대결에서 일시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이 폐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다각도로 현실화되고 있고 더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다양한 논리와 개념이 동원되고 있지만, 결국 단순화하면 우리가 여전히 미국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제는 중국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이다. 전자는 우리가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계속 타야 한다는 말이고, 후자는 중국의 새로운(?) 논리들을 옳은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적 상황과 동북아 정세의 본질을 고찰하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미국이 아니다. 옳은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 미국이 국력이 더 세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적 지향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미국을 선택

하는 문제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원칙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설혹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옳은 원칙과 가치적 지향도 일시적으로는 패퇴하는 경우가 있다.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첫 단추를 켜 프랑크 혁명은 황제정이 몇 차례나 복귀하는 반동적 궤적을 거쳐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하였다. 유럽은 1차 대전에서 겪은 피의 교훈을 잊지 못하고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여 전 세계를 다시 엄청난 희생으로 몰아갔다. 부화뇌동한 일본이 아시아에서 자행한 악행들은 우리 민족과 많은 아시아 민족들에게 한 맺힌 과거가 되었다. 연합국 진영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전후 민주적 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은 사회주의체제를 국가적 폭력을 통해 수립했다.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절반 가까이를 이념의 도가니에서 들끓게 하였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의적 지향이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지만, 구소련은 그렇지 않았다. 동유럽 여러 국가들에 탱크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수립한 체제는 결국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역사를 긴 안목에서 보지 못하면 오늘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물리적 국력만 커지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리가 현능주의이다. 점차 이러한 논의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과거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의 중화질서로 회귀함이 당연하다는 류의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능가하면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가치다. 역사를 내다 볼 때 이러한 패퇴는 영원할 수 없다. 물론, 다시 미국이 일어나 원래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게 될지 다른 민족과 국가가 그 역할을 이어서 진행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속되게 된다. 여러 경로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다시 미국의 힘을 키우는데 협력해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이라는 지난 사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을 민주화하여 중국이 세계사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대한민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되어 현재 미국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경로로 유럽연합 등 다른 대륙과 문명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하는 가치의 패권국이 되는 예상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너무 먼 미래의 가정이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 우리의 선택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자. 필자는 현재 우리의 선택을 가치적 미국 선택론이라 명명한다. 더 먼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주역이 되는 꿈을 꾸지만, 당면해서는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미국은 단순히 힘이 있는 최강대국이 아니라 가치의 확산을 주도하는 가치의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낡은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세계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인류에게 큰 행운이다. 신냉전기 우리의 선택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전제가 바로 이것이다. 신냉전기를 맞은 오늘 우리의 선택은 원칙과 가치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치적 미국 선택론은 한미동맹을 더욱 의미 있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 우리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의 주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가치 동맹이라는 평가를 해왔다. 그렇지만 힘의 불균형이 있는 동맹이었다. 점차 우리의 국력을 길러 장기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동맹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가치적 미국 선택론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세계사의 흐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으로 유유히 전진하고 있다. 민주진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방지한다.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된 서유럽에서는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간의 항구적인 협조와 지원의 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류는 지난 수백 년간의 역사를 통해 교훈으로 체득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이룩했지만 공산당독재를 고수하고 있다. 자기 체제를 합리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가치적 미국 선택론이 유일한 결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힘을 기준으로 중국에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처음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 합리·체계적인 사고, 기본과 원칙에 고지식한 軍의 필요성

김 성 진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방정책포럼위원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를 혼란의 카오스에 빠뜨렸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엄청난 폭우와 더불어 고조되고 있는 지난(至難)한 위기 국면이 언제쯤 타개될 수 있을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대부터 국제사회의 패권과 질서는 그리스와 로마-오스만제국-잉글랜드-프랑스-영국 등 강한 군사·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주도했다.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아메리카 식민지 주(州)로 영국의 핍박과 폐단을 직접 겪었지만, 독립전쟁(1775~1783) 초기까지 왜! 독립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무지했다. 이들은 남북전쟁(1861~1865)-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거치며 개척과 혁신, 창조 정신(Frontier Spirit)을, 민군관계의 정립을 통해 시민 정신(Civic Spirit)을 형성하면서 가족(이웃)과 국가를 우선으로 인식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정체성(identity)’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점차 독존(獨尊)에 빠져 인·물적 교류와 지식·정보가 공유되는 현실을 도외시하며 ‘Pax Americana’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대표적으로 2021년 3월, EU는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 합동군’ 창설을 확정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최신무기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오해, 서방 여론이 화전(和戰)으로 갈렸지만, 담론(談論)을 주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위상과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17세기 유럽지역의 ‘근대국가’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관료조직은 징세·입법·동원·군사 분야 등에 전권(全權)을 가졌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하며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왔지만, 정작 필요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는 관심이 소홀했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 공군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부의 기득권 다툼으로 ‘소명의식(Calling)과 군인정신’의 형성 시도는 주요 논제(Agenda)에서 밀려났다.

최근 굳건한 韓·美 군사동맹을 표방하고 연합훈련 규모의 확대, 목표가 분명한 야외 기동훈련의 진행 등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K-21 초음속 시제기의 비행 성공과 폴란드 등 유럽국가와의 방산 협력, 사드에 관한 안보 주권 행사, 신속한 수해 복구지원 등에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맹위(猛威)를 떨친다. 최영함의 통신 두절, 같은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여

군 자살 및 성추행 사고, 수방사의 세 번째 자살,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 훈련소의 열악한 시설과 부당한 군기 잡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해병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기강 해이 현상은 넘쳐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관련 계층이 MZ·알파 세대인데 기성세대의 사고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원지(source)가 어딘지, 무엇이 문제인지 끝까지 파헤친 다음 굵은 부분에 정확하게 메스(scalpel)를 들이대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급급하다. 셋째, 언제인가부터 각종 사태가 발생하면, 원칙에 충실하기보다 공명심과 명예욕으로 대처한다. 그러다 보니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거듭 다짐해도 성과는 없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극복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MZ 세대와 알파 세대의 기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요 직위자들이 이들의 무한경쟁, 승자독식, 개인주의와 정의·인권·공정·평등에 관한 인식, 권위주의와 갑질에 저항하는 기질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에 부합하는 지휘통솔 기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전장(Battle-field)에서 소부대지휘자가 “나를 따르라!”라는 전투 방식과 MZ·알파 세대에 대한 지휘방식은 달라야 한다. 美 남북전쟁에서 승자(Winner)는 최대 군벌(軍閥)로 인정과 의리에 집착한 로버트 E. 리(남군)나, 우직한 율리시스 S. 그랜트(북군)가 아니다. 승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능한 관료(지휘관)들을 교체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평시의 리더십과 전장 리더십을 구분하지 않는 아날로그식 사고에 젖은 계층이 ‘라떼’만 고집하면 난감해진다. 셋째, 뷰카(VUCA)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을 상식·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명의식과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고유의 정체성과 군인정신을 정립하여 안보를 방해하는 세력에게는 고지식해야 한다. 외양(外樣)에 치중하면, 대군 신뢰와 군사 전문성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아날로그적 인식, 보여주기 방식만으로 난국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나 군대만으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전쟁은 파괴력이 큰 무기나 특정한 소수의 지휘관만으로 승리를 결정짓지 못한다. MZ·알파 세대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기치 아래 지휘관과 구성원이 결속할 때 대군 신뢰도, 전쟁의 승리도 쟁취할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비전통적 위협 대비와 보훈활동 강화의 필요성

나 태 종

(충남대학교 교수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 전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한 한국의 높은 위상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장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광복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개관하면, 우리 민족은 광복(1945.8.15)과 동시에 곧바로 국가를 건설하지는 못했지만 극심한 사회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1948.8.15)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북한공산집단의 전면남침으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지만(1950.6.25~1953.7.27) 유엔과 자유우방의 전투병력 파병과 물자 및 장비, 의료지원에 힘입어 공산세력의 야욕을 응징하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은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전후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예산이 부족하여 선진국의 원조를 받을 수 밖에 없던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그러나, 근면하고 검소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서구 선진국가 들이 300년~400년에 걸쳐 이룩했던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불과 50년~60년 만에 달성하고 지금은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도국 반열에 올라섬은 물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 4위권의 과학기술 수준과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부상하여 그야말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 포괄안보개념의 대두와 비전통적 위협대비 활동 추진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괄목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가장 지배적인 요인으로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침여하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발전과 이익의 달성을 우선시 하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사리사욕의 집착보다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데에는 각급학교의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군 복무를 마친 1,000만 재향군인회원들의 숭선수범이 뒷받침 되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정의는 이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가안보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냉전시대에 국가안보는 전통적 위협인 군사적 위협의 대비 위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에는 군사적 위협에 부가하여 자연재난과 대형 복합사고의 발생, 감염병 창궐과 확산 등 비전통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안보위협인 군사적 위협 이외에도 재난, 테러, 환경, 기후위기, 사이버 등 비전통적 위협까지 안보의 범주를 확대하여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전통적 위협(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는 국가와 군이 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때 재향군인회 차원에서는 자연 및 사회재난 위기,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감염병, 테러, 사이버 등 비전통 위협(비군사적 위협)의 대비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재향군인회 산하 시도회, 시·군·구회, 읍·면·동회, 그리고 해외지회 등 4,018개에 이르는 조직활동, 그리고 계급별·군별·임관구분별·부대별·참전단체별 친목단체 및 협력단체들과 연계하여 향군회원들은 물론 국민들과 해외교민들을 대상으로 비전통 위협 대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동맹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및 보훈외교활동 강화

재향군인회에서는 대내적으로 국민안보의식 계도와 국가안보정책 지원 활동을 통해 국내 최고·최대의 명실상부한 안보단체로서 위상을 바로 세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을 편성하여 외국 향군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 세계재향군인연맹(WVFI) 활동, 한미동맹강화 활동 등의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3,808명의 이름을 새겨 지난 7월 26일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헌정된 ‘추모의 벽’은 미국 내 참전기념 조형물 가운데 비(非) 미국인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물이 되었다. 헌정식에 참석한 미국 측 고위인사와 참전용사, 그리고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조태용 주미대사, 신상태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참석자들이 “자유수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한 것은 한미동맹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9일 국가보훈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참전국과의 연대를 통한 보훈외교 강화를 주문하면서 “6.25전쟁 참전국 방문때 반드시 보훈일정을 포함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6.25전쟁 참전국(물자장비, 의료지원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등 보훈행사와 우호증진 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가까운 장래는 물론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자유수호 연대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미래 안보환경은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 위협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통적 위협요인들이 증첩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국내외 안보정세를 전망하여 위협의 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재향군인회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에서 비군사적 차원이 부가된 비전통 위협, 즉 경제·사회적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단의 다양화, 대규모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및 테러위협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